

불통정치에 대한 민심의 분노

예로부터 민심은 천심이라 하였거는 민심을 의면한 정치가는 언제나 인민들의 버림을 받았다.

인민들의 의사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제 고집대로만 하는것으로 하여 오늘 《불통정치》, 《불신정치》, 《불통독재》라는 비난과 규탄을 받고있는 남조선당국자의 처지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집권자는 신년기자회견이라는것을 벌려놓고 자기의 《고심어린 진정》을 털어놓았다.

그런데 그것이 불에 불에 기름 끼였는 격이 되여 남조선 각계에서의 《불통론난》을 더욱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남조선의 야당들은 집권자의 신년기자회견이 《박근혜식 자랑스러운 불통》만을 확인한 회견이었다고 하면서 민중의 정당한 요구를

《불법적인 폐쓰기》로 규정하고 자기의 기준에 맞지 않는 모든 행동을 가차없이 탄압하겠다는 《시퍼렇게 날선 경고를 던졌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불법선거행위에 대해서는 지나간 문제라며 묵살하고 몽땅 날려보낸 《북지》공약에 대해서도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으며 중소기업과 청년실업 등 실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외면하였다고 하면서 현 《정권》이 불통《정권》임이 립증되었으니 이제 민중은 냉정하고 준엄한 평가를 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편 인터넷에서는 세금이 뛰여오르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나오는데 집권자는 강아지이기를 하며 히죽히죽 웃거나 하고 경제문제에 동문서답하면서 기업들이 알아서

잘하라는 무책임한 소리만 했다고 하면서 《열핏 들으면 그걸듯 한데 가만히 보면 구체적인 진단은 하나도 없었다.》, 《국제적망신이다.》 등의 비난글들이 련일 울랐다.

남조선언론들도 앞을 다투어 비난하고있다.

언론들은 집권자가 평소에는 불통과 비타협으로 진격하다가 국면이 불리할 때면 말로만 《국민대타협》을 웨친다고 하면서 사회적혼란을 가져온데 대한 반성의 모습은 조금도 없이 자기 하고싶은 말만 하고 민중이 듣고싶은 이야기는 외면하는 집권자의 불통자세에서 변화가 없는 한 오늘의 정치적혼란 국면은 계속될수밖에 없을것으로 보인다고 개탄하였다.

불통정치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는 심지어 보수패당 내부에서까지도 터져나오고

있다.

집권자의 측근, 핵심이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의원들까지도 인터뷰에서 《불통이 문제》이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야당의 주장이 옳다.》고 하며 집권자를 비난하였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청와대에서 차린 먹자판에 참가를 거부하는것으로 자기들의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다.

집권자의 불통독재정치에 환멸을 느낀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새해벽두부터 투쟁이 고조되고있다.

남조선 민주로총은 지난 9일 2차총과업결의대회를 열고 《불통을 넘어선 먹통수준》의 이 《정권》에 더 기대할것도, 미련도 없다고 하면서 현 집권자의 퇴진을 요구하여 총파업을 포함한 각종 투쟁을 벌릴것을 결의해나섰다.

1월의 흑한속에서 초봄집회도 련이어 열리고있다.

11일 밤 각 단체들의 기발을 나뭇기며 서울시청광장에 모여든 많은 시민들은 초봄집회를 열고 남조선집권자의 퇴진을 요구해나섰다.

그들은 현 당국이 온갖 령

역에서 친일, 친미, 친제벌행각을 벌려놓고있다고 하면서 이제 더는 참을수 없다, 박근혜《정부》들어 사실 바람잡을 날이 없었다. 오늘도 철도파업에 이어 의사를 파업론자가 이어지고있는것도 다 불통독재 박근혜《정부》가 자초한 일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하며 현《정권》이 이대로 간다면 전체 인민이 들고일어설 날도 멀지 않다고 웨치면서 투쟁을 계속해나갈 의지를 피력하였다.

그들속에는 일본군성노예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을 애추한것이라고까지 외곡한 《교회사 력사교과서》에 허가를 내준것도 모자라 그것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외부압박이라며 처벌하였다는 《정부》를 보며 정말 참을수 없어 공부하던 책상을 밀치고 연단에 섰다는 나 어린고등학생들도 섞여있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현 보수당국의 불통정치가 민심의 커다란 저주와 규탄의 대상이 되고있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서 희



← 1 반《정부》투쟁을 벌리고있는 남조선인민들



재미동포들 남조선집권자의 사퇴를 주장

재미동포들이 남조선집권자의 사퇴를 요구하여 싸우다 분신자살한 남조선주민에 대한 추모식을 3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졌다.

참가자들은 남조선주민리남자가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에서 《박근혜사퇴》,

《투검실시》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투쟁을 벌리다가 몸에 불을 달았다고 밝혔다.

그가 유서에서 현 《정부》의 불법선거를 규탄하고 투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주장하면서 이 싸움에 모든

국민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사기협잡으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남조선집권자는 국민의 요구대로 당장 사퇴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사대와 굴욕의 상징—《방위비분담금》

지난 11일 남조선과 미국사이에 제9차《방위비분담금》협상이 타결되었다고 한다.

이에 따라 남조선당국은 올해 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을 9 200억원이나 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미국의 강도적요구에 말 한마디 못하고 굴종하고나는 남조선보수당국의 사대근성이 가쳐온 치욕적인 결과가 아닐수 없다.

알려진것처럼 미국은 해마다 남조선주민미군의 《관리 및 유지》의 미명하에 엄청난 《분담금》을 남조선에 요구해왔다.

그것이 얼마나 막대한 액수인가 하는것은 《분담금》이 오늘에 와서 처음보다 8배이상 늘어난 사실을 놓고도 잘 알수 있다.

지금 남조선주민 미군이 이렇게 빼앗아낸 《분담금》은 흥청대며 쓰고도 남아돌아가고있는 형편이다.

지난해 남조선의 《국정감사》에서 밝혀진데 의하더라도 남조선주민 미군이 쓰고남은 《분담금》은 7 611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여기에 남조선당국이 미군에게 주지 못한 액수를 합하면 1조원이 훨씬 넘는다고 한다.

남조선 시민사회단체들이 폭로한데 의하면 미국은 해마다 여기서 수많은 돈을 은행에 채투자하는 방법으로 많은 리자수익을 올려갔다고 한다.

《투검실시》라는 프랑카드를 들고 투쟁을 벌리다가 몸에 불을 달았다고 밝혔다.

그가 유서에서 현 《정부》의 불법선거를 규탄하고 투검을 통한 진상규명을 주장하면서 이 싸움에 모든 국민이 떨쳐나설것을 호소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사기협잡으로 권력의 자리에 올라앉은 남조선집권자는 국민의 요구대로 당장 사퇴해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이런 비굴한 행동을 하고있는 원인은 다른데 있지 않다.

굴욕을 감수하고서라도 어떻게 하나 상전의 비위를 맞추고 그의 힘을 빌려 공화국을 어찌보려는것이 진짜속심이다.

실제로 남조선보수당국이 이번 협상과 관련한 발표문에서 《주한미군주둔환경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횡설수설한것이 이를 말해주고있다.

사실들은 사대와 매국, 반통일을 일삼는 친미사대《정권》이 계속 존재하는 한 남조선은 식민지하수인의 불행한 처지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는것을 다시한번 실증해주고있다.

사대와 굴종이 망국의 길이라는것은 지난온 력사가 보여주는 심각한 교훈이다.

성증삼

굴욕협정을 거부하기 위한 활동에 나설것을 주장

남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이 12일 논평을 발표하여 미국의 강도적요구에 순응한 괴뢰패당의 굴욕적인 처사를 단죄하였다.

논평은 당국이 미국과 미군유지비분담금특별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을 통해 올해 미군유지비를 지난해보다 5.8% 늘이기로 합의한데 대해 까뻐했다.

미군이 유지비중에서 불법추적한것만도 1조원이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막대한 자금을 미군에 제공하기로 한것은 용납할수 없는 일이라고 규탄하였다.

미군유지비중역리유로 미국의 국방예산삭감을 든것은 경제위기와 침략전쟁 등

으로 인한 정책실책의 책임을 남조선에 떠넘기려는 의세의 천만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굴욕적인 행위라고 주장하였다.

논평은 협상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국회》가 굴욕적인 협정에 대한 비준을 거부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 전개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사건관련자들의 한가한 휴가, 왜?

남조선에서 정보원이 또다시 사회적비난거리로 되고있다. 그것도 그렇것이 정보원이 불법《대선》개입사건에 관련한 직원들에 대한 어떤 처벌도 하지 않은것이 최근에 드러났기때문이다. 폭로된데 의하면 인터넷대글로 지난 《대통령》선거에 불법개입한 정보원 심리전단소속 20여명은 지금 다른 부서에서 일하고있거나 일부 직원은 한가하게 휴가를 보내고있다고 한다.

어처구니가 없어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지난해 11월 정보원 원장 남재준은 《국정감사》에서 불법《대선》사건과 관련하여 사건관련자들의 행위를 《개인적일탈》이라고 해명하였다. 말하자면 정보원이 조직적으로 개입한것이 아니라 일부 개별적인물들이 자기 의사에 따라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하였다는것이다. 그렇다면 정보원은 남조선정치정세를 일대 혼란으로 몰아넣은 그들에 대해 죄파에 따른 그 어떤 처벌이라도 하는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처벌은커녕 휴가까지 주고있다. 결국 정보원은 지난 불법《대선》사건에 조직적으로 개입하였다는것을 그대로 인정한행이다.

문제는 정보원이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해 사건관련자들에게 처벌을 주고싶어도 주지 못한다는데 있다. 만약 처벌을 준다면 20여명중의 그 누가 억울한 심정을 담아 불법《대선》사건의 진상을 폭로하는 폭탄발언을 할지 어떻게 알겠는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정보원의 처지가 가관하길 그치없다.

정보원이 이런 처치에서 벗어나자면 오직 하나 민심의 요구대로 이제라도 해체되는 길뿐이다.

김응철

최근 남조선법원이 40년전 《울릉도간첩단사건》으로 악명을 받았던 피해자들의 협의가 무죄라고 판결하였다.

《울릉도간첩단사건》은 《유신》독재《정권》이 1974년에 제일동도들과 태풍피해를 입고 공화국 경내에 들어왔다가 돌아간 남조선어민들을 47명이나《간첩》으로 몰아 체포하고 야만적인 고문을 들이대던 끝에 3명을 사형하고 수십명에게 감옥살이를 시킨 사건이다.

《인민혁명당 사건》, 《문인간첩단사건》, 《진도간첩단사건》등 최근년간 남조선에서 《유신정권》시기《간첩단사건》들에 대한 무죄선고가 련이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내려진 이번 판결을 통하여 남조선인민들은 《유신》독재자가 얼마나 야만적이고 반인민적인 폭압정치, 파쇼통치를 자행했는가를 다시금 돌이켜 보고있다.

남조선을 친미군사파쇼독재의 암흑천지로 전락시킨 《유신》통치는 그 잔인성

과 야수성, 악랄성에 있어서 루테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무시로 발동되는《비상계엄령》,《위수령》,《비상사태》,《긴급조치》에다가 정치박해, 정치유흥, 방첩철간과 방범주간, 봉은자색출운동, 《유신》반역자박멸운동으로 남조선주민들은 어느 하루도 마음놓고 살지 못하고 공포에 떨지 않고 야수성, 악랄성에 있어서 루테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무시로 발동되는《비상계엄령》,《위수령》,《비상사태》,《긴급조치》에다가 정치박해, 정치유흥, 방첩철간과 방범주간, 봉은자색출운동, 《유신》반역자박멸운동으로 남조선주민들은 어느 하루도 마음놓고 살지 못하고 공포에 떨지 않고 야수성, 악랄성에 있어서 루테를 찾아볼수 없는것이였다.

안팎이동무려나고쳐야

남조선당국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와 관련한 공화국의 통지문을 두고 《유감》이니,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느니, 《금강산관광제도의 론의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여론화하고있다.

이번에 공화국이 남측에 통지문을 보낸것은 조성된 정세와 시기 등 모든것을 고려한 지극히 정당한 조치이다.

알려진것처럼 남조선에서는 새해에 들어서자부터 총포탄을 쏘아대면서 북침전쟁연습을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하였다. 뿐만아니라 2월말부터는 방대한 무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이 동원되는 사상최대규모의 《키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게 된다. 이 전쟁연습에서는 북의 그 무슨 《금반사대》를 예상하여 대규모상륙훈련도 벌어지게 된다고 한다.

총포탄이 울부짖고 상대방을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이런 살벌한 분위기속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마

음원히 할수 있겠는가 하는것이다.

긴장과 공포, 불안감만이 감돌게 될정세속에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진행하는것은 오히려 안하는것만 못한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것이다.

더우기 지금은 계절적으로도 가장 추운 때이다.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마당에 나설 사람들이 고령의 로인들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남측에서 다른 일이 벌어지는것이 없고 우리의 제안도 다같이 협의할 의사가 있다면 좋은 계절에 마주앉을수 있다고 한 공화국의 통지문은 더우기 사리에 맞고 정당한것이다.

그런데도 공화국의 통지문을 두고 이러쿵저러쿵 하는것은 대결속임과 북침용계를 가리워보려는 낯간지러운 행위가 아닐수 없다.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을 이루어가는 데서 중요한것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남조선당국은 안팎이 다른 저들의 행동부터 고쳐야 한다.

김철호

최근 남조선의 보수당국이 검정제로 되어있는 력사교과서를 《국정제》로 바꾸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교육부가 교과서를 자체로 편집, 수정하는 이른바 《편수기능》을 되살리려 하고있는것이 바로 그렇다.

검정제는 교육당국이 제정한 검정기준을 통과한 여러 민간출판사의 교과서를 학교들에서 자유롭게 고르도록 하는 제도이며 《국정제》는 《정부》가 만든 하나의 교과서를 학교들에 일률적으로 배포하여 사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현재 남조선에서는 력사교과서의 경우 초등학교는 《국정제》, 중·고등학교는 검정제로 채택되고있다.

만약 교육부가 교과서를 자체로 편집, 수정하는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교과서의 검정과정에 직접 개입할수 있게 되며 그것은 사실상 《국정제》로 전환된것이나 다를바 없다.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이것이 《국민적갈등과 분열을 없애》는데 있다고 떠들고있지만 속심은 결코 거기에 있지 않다.

남조선의 고등학교들에서의 력사교과서선택과정을 봐도 잘 알수 있다.

알려진것처럼 최근 거의 모든 고등학교들에서

는 《뉴라이프 교회사 력사교과서》사용을 전면거부하였다.

보수여용학자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력사교과서의 내용을 보면 일제식민지통치시기의 친일매국노들을 그 무슨 《성상》의 주역으로 미화하고 《5.16군사쿠데타》와 남조선일본《협정》체결을 터무니없이 《경제발전의 계기》로 외곡묘사하는가 하면 미국의 조선민주분열책동을 찬양하고 동족에 대한 극도의 적대감을 제는 《정부》가 만든 하나의 교과서를 학교들에 일률적으로 배포하여 사용하게 하는 제도이다.

《유신》독재부활을 노린 력사교과서 외곡소동

과 전교조의 개입과 압력이 있었다고 들고나오면서 해당 학교들에 대한《특별조치》를 한다 어쩔나 하며 복잡소동을 벌려왔다.

그리고는 력사교과서의 현행 검정제를 《국정제》로 바꾸어야 한다고 떠들어댔다.

이러한 속에 교육부가 이전 독재시기에 있었던 《편수기능》을 되살리려 하고 있는것이다.

여기에는 이전시기의 력사교과서를 저들의 의도에 맞게 뜯어고쳐 학생들에게 반동적인 력사관을 강제주입시켜 동족을 무조건 적대시하는 정신적불

신》독재자를 그 무슨 《산업화의 은인》으로 내세우는가 하면 《유신헌법》은 《북의 위협》에 대처한것으로 정당화하고있다.

또한 공화국의 토지개혁을 헐뜯고 주체사상과 사회주의경제를 비방하며 지난 조선전쟁의 력사적사실과 《천안》호사건의 내막을 외곡날조하였다.

이것은 남조선 각계의 커다란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켰으며 고등학교들에서는 력사를 심히 외곡한 《뉴라이프 교회사 력사교과서》를 사용하는것을 전면거부하였다.

그러자 남조선의 보수집권세력은 고등학교들에서의 교과서채택과정에 야당

구자로 만들고 사회를 보수화하여 《유신》독재를 손쉽게 부활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남조선의 야당을 비롯한 사회 각계가 력사교과서의 《국정제》전환을 《유신회귀》로 낙인하고 이를 강력히 반대해나서고있는것은 너무도 웅대한것이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수 없듯이 력사는 누가 외곡한다고 달라질수 없으며 뜯어고친다고 지워질수 없다.

독재통치를 일삼고 력사의 진실을 감히 오도해나서며 《유신》독재부활을 꾀하는 보수집권세력의 반역적책동을 남조선인민들은 결코 용납치 않을것이다.

본사기자 주광일

야당강제해산을 반대하는 시국선언발표

남조선사회 각계 인사 1 145명이 당국의 통합정보당 강제해산책동을 반대하여 14일 《한겨레》신문에 시국선언을 했다.

그들은 시국선언에서 당국이 권력기관의 불법선거개입에 항거하는 초물민심이 들끓처럼 일어나자 내란음모사건을 터뜨리고 정당인 통합정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청구를 강행하였다고 비난하였다.

이것은 반민주적폭거라고 규탄하였다.

내란음모사건의 증거로 지적된 이른바 《지하혁명조직》의 명칭, 결성시기, 조직구성 등 어느 하나 확인된것이 없으며 현재 재판중에 있는 사건을 정당해산의 근거로 삼는것자체가 과도한 요구라고 밝혔다.

통합정보당의 강제해산을 막는것은 사회의 민주화를 실현하는 문제이며 시민사회단체로까지 확대된 정치적권리에 대한 침해를 막는 것과 련관되어있다고 주장하

였다.

야당에 대한 강제해산을 반대하여 망심있는 민주세력이 손잡고 나서자고 호소하였다.

《정부》가 지금이라도 통합정보당 해산심판청구를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박근혜《정부》가 끝끝내 독재시기의 공안통치로 회귀한다면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것임을 경고한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무죄판결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를 하면 비밀약속으로 간주되어 중앙정부부의 지하고 문실에 끌려가 물고문, 전기고문, 마약고문, 백열등고문, 전기간호리코고문 등 중세기적고문을 받아야 했으며 《배고파 못살겠다.》는 말한마디에 《불온분자》로 몰려 즉결심판을 받은 웃지 못할 사실들도 비일비재했다.

알려진 자료에 의하더라도 18년간의 《유신》독재기간 한해에 70만~80만명, 연 1 400여만명의 무고한 인민들이 체포투옥되고 학살당하

《유신》독재《정권》은 저들의 반역적이고 반인민적이며 반통일적인 폭압통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자주, 민주, 통일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을 《북의 간첩》으로 몰아 마구 탄압, 투옥, 학살하는 피비린 살인만행도 꺼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유신》독재체제가 무너진지도 수십년체월이 흘렀지만 그것이 남조선인민들에게 남긴 상처는 오늘까지도 아물지 않고있다.

지금은 력사를 돌이켜보는 것을 통하여 위위와 진실, 정의와 부정의를 정확히 평가하고 잘못된 력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하지만 오늘날 남조선에서

《유신》독재부활을 꿈꾸며 력사를 꾸꾸로 되돌리려는 보수패당의 망동을 방관시한다면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는 절대로 보장될수 없으며 민족의 통일도 그만큼 늦어지게 된다는것은 자명한 진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이번 《울릉도간첩단사건》 무죄판결 사실을 보면서 자기들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또 조국통일을 위해서 《유신》독재부활을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것을 다시금 자각하고있다.

본사기자 명금룡